

3야 “고용세습 국정조사”…여 “국감 뒤 논의”

한국당·바른미래·평화당 요구서 제출 전방위 압박 민주당 “정치공세는 중단”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에 대해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하면서도 침소봉대식의 정치공세는 중단해야 한다고 나섰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 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야 3당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한국 국토정보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국가 공기업에서 동일한 유형의 채용 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며 “채용 비리·고용세습 의혹은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형태로 만연되고 있을 개연성마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 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이 국정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놓고 온도 차를 보여 향후 협상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평화당은 문재인 정부는 물론 과거 정권에서의 채용비리도 조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야3당 의원들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과에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이상수, 바른미래당 김수민, 자유한국당 송희경,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연합뉴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면서도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며 방어막을 쳤다. 또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과 보수언론이 일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맞붙을 놓기도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용비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생활 적폐”라면서도 “그러나 있지도 않은 사실을 부풀리고 왜곡하는 등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국당이 제기한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아들

과 인천공항공사 노조 간부 아내의 특혜 채용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거짓 선동, 정치공세, 왜곡투성이”라고 비판했다. 박광운 최고위원도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국회가 중심이 돼 학계,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모델을 해법을 마련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권이 전방위로 국정조사를 압박하자 “국정감사부터 마친 뒤에 논의하자”고 한 발짝 물러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국감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정리했다”며 “국감이 며칠 더 남았으니 야당이 충분히 더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도 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조직적인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여당에 부담이 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국감 브리핑

“감사원 제구실 못해 유치원 비리·고용세습”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목포시)은 22일 최근 불거지고 있는 유치원비리,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 등과 관련해 감사원의 대국민공개사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감사원에서 진행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유치원비리와 고용세습 등으로 왜 국회가 필요한지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그러나 만약 감사원이 헌법 독립기관으로 제 구실을 했다면 이



런 국민적인 분노가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원은 철저한 반성을 하고, 대국민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앞으로 실시되는 권력기관 감사, 국민 관심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철저하게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수질오염, 서울의 5배”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 갑)은 22일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전남지역 수질 오염도가 서울에 비해 5배나 높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현재 광주와 전남의 수질 기준 초과율은 각각 10.9%와 12.1%로 전국 평균 6.3%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주요 초과 항목은 총대장균, 질산성 질소, 염소 이온 등이라고 지



적했다. 김 의원은 “수질 오염은 관정의 위생관리 부실, 오염원의 유입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한국환경공단의 철저한 주의의를 촉구했다.

이에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물 관리 일원화를 통해 수자원공사와 함께 오염원 예방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당정청, 유치원 비리 종합대책 25일 발표

사립 유치원 비리가 정치·사회 최대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25일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혜찬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에서 크게 문제가 된 사립 유치원 문제에 대해 당정청 협의를 거쳐 오는 25일에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그간 여러 물의가 있었는 데,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에게 큰 충격을 준 사안이라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당정청 협의를 긴밀히 해서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바로세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이날 대전의 한 카페에서 사립 유치원 학부모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가 포기하고 타협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종합 대책 발표를 사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이 간담회에서 유 장관은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정부·청와대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비리 사립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비리 유치원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요청한 상태다.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한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지난 21일 당정청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용진 의원의 사립 유치원 규제 강화 3법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가 개정안을 당론으로 검토한다고 했다”고 답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평화당 “농어촌공 태양광에 7조 투자…농촌·농업의 위협 우려”

국감 현장

농해수위 국감

여야 신재생에너지 격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태양광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민주평화당 김종희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연간 전체 예산의 2배에 육박하는 7조원 이상의 거액을 투자, 원자력 발

전소 4개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확인되면서 공사의 성격이 ‘태양광 발전공사’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제기했다.

또 “막대한 차입금을 쏟아 부은 뒤 전력 공급 정책의 변화 등 예기치 않은 돌발변수가 발생할 경우 무리한 차입에 의한 경영악화가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가 농촌과 농업의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농어촌 공사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플랜’에 따라 수상 태양광을 올해의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전국 저수지에 관련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속도전에만 치중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다다익선 속전속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급박하게 태양광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농어촌공사가 아니라 태양광공사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비꼬았다.

이에 민주당 박원주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이미 이명박정부 때 17건, 박근혜정부 24건의 태양광 사업을 시작했다”며 “오래된 문제인데도 들어 새로 완공된 시설이 없다. 야당은 이 문제를 왜 정쟁화하는가”라고 반박하면서 “현실에 근거한 연차별

계획 수립과 단계적 사업 확대로 사업 실효성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0월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총 171지구, 10조 9000억원 규모인데 총사업비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 횟수는 666회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국비 증액은 3503억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여건 변동, 공법개선, 설계 오류 등으로 수천억원의 사업비 증가와 기간 연장으로 인한 손해는 결국 국가와 농민”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